

지자체 '기업 모시기' 전쟁

성공 유치 사례

구미시, 외국기업 투자금 20% 현금 지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모시기 열풍'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값싼 공장부지 제공이나 세제 지원은 옛말이고 현금 지원도 불사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은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평이나 재산상의 제약도 감내하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도 기업유치나 입주기업 인월해소를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뛰고 있다. 모두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다. 성공 사례로 꼽히는 타지역 사례를 소개한다.

분양가 낮추고 인프라 갖춰

◇지자체가 직접 댄다=1991년 86만평으로 조성된 통영시 안장국가공단은 2000년까지 인프라 부족으로 46만평이 방치상태였다. 그러나 통영시가 2001년 분양가를 평당 46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하 제시하고 20억원을 투입, 선

박 접안시설 등을 갖추자 투자 러시가 이뤄져 현재 중소조선 기자재 기업 12개사로부터 2천 261억원을 유치해 1천 3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졌다.

투자유치로 인구 크게 늘여

◇기업유치로 인구도 증가=진주, 사천 등 서부경남은 침체가 지속됐으나 1999년 이후 '진사지방산단'에 외국인 투자기업 10개사를 유치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

이같은 활발한 투자유치로 지방도시의 전반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진사공단 인근 지역인 사천읍, 사남면, 정동면 등 3개 읍면 인구가 1997년 2만 9천748명에서 2004년 3만 4천 200명으로 부쩍 증가세를 보였다

◇파격적인 조건 제시=경북 구미시는 외국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20% 내에서 현금을 지

원한다. 업종 분류에 따른 개별별 외국인 투자지역에 공장을 만들 경우 3천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체에는 공장 임대료를 100% 감면해 준다.

6개월 범위 내에서 내국인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외국기업에는 고용보조금을 주며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을 보조한다. 이같은 시책에 따라 구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올 5월까지 외국인 기업 10개사로부터 11억 달러를 유치했다.

1인당 월100만원 고용보조금

국내의 지역공단 부지 취득 기업에 대해서는 도세(취득·등록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시세(재산세)는 5년간 받지 않는다.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초과 1인당 50만원씩의 이전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업유치 총력 체제=경남도가 지난 1999

년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 이후 기업의 지역 진출에 따른 소송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산자부에 보고됐다.

단체장·정치인 발벗고 나서

반면 전남의 경우 기업입주 과정에서 이해관계로 간혹 소송이 제기돼 투자유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동종 업체는 물론이고 기업입주 예정지역 주민들이 단체행동으로 맞서는 바람에 기업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이는 결국 주민들과 지역 전체의 손해를 돌아간다.

특히 투자 마인드가 뛰어난 경남지역 정치인들은 기업유치 전쟁으로 적극 뛰고 있다.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사회단체장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주를 찾아 투자를 권유하는 등 타지역 인사들과 비교해 적극적이라는 평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농림부 "사업지구 무상양여 불가"

J프로젝트 또 압초

전남도가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인 영산강 3지구 간척지에 대해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무상양여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6일 농림부는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에게 제출한 '해남·영암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관련 검토' 자료를 통해 "관광레저도시에 포함된 2천226만평 규모의 간척지의 양도 가격은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영산강 3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촌

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간척지의 무상 양여 가격은 실거래가격을 감안할 경우 최소 3천500억원에서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그동안의 무상양여 주장에서 벗어나 우회 전략을 통해 간척지를 저가에 양수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지자체의 부지 매입시 국고 지원 등을 근거로 간척지 양수시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관광레저도시 SPC(특수목적회사)의 자본금으로 간척지 양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거래가 양도" ... 4 천억원 달해

전남도 '정부차원 지원'대책 모색

공사가 각기 추천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의 평균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간척지 무상양여에 대한 근거로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권리 양도시 적용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 같은 농림부의 입장은 그동안 전남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간척지 무상양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 무상 양도시에도 매립 원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양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성 원가가 약 1천

여기에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에 근거해 간척지를 싼 가격이나 무상 양여 받는 방법을 추진하는 한편, 한·미 FTA 체결로 농도인 전남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림부의 간척지 무상양여 계획은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간척지 무상양여가 물 건너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전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6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전효숙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증여세 탈루 의혹에 "증여의지 없었다"

6일 열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 후보자의 임명과정에 대한 편법 시비와 코드 인사로 인한 정치적 중립 문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 정황이 선연되는 등 파장으로 치달았다.

◇인사청문회 무효 논란=한나라당,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사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인사청문회가 법적 무효인 것은 물론,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사퇴했다면 즉시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된 뒤 국회에 동의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며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헌법재판관 전효숙 임명요청안 및 헌재소장 동의안으로 냈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헌법재판관 자격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임명절차 공방으로 정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재천 의원은 "헌재소장 임명 속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예초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를 표시했지만,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엄 의원의 질문을 잘못 이해했으며 헌재소장에 임명한다면 그 (헌법재판관) 자격을 같이 검증하는 걸로 안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코드 인사 논란=야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고 헌법재판관 재직시 중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일맥상통하는 의견을 낸 점 등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전 후보자가 참여 정부 들어 첫 여성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니

3년 만에 헌법재판소 수장으로 발탁돼 사실상 코드인사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전 후보자가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점에서 야당이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흐르는 행위"라며 전 후보자를 거들었다

전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왔다"며 "정부나 특정인의 의지에 맞는 판결이라는 지적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여세 탈루 의혹=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전 후보자가 장녀에게 3천여만원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 거론될 즈음 뒤늦게 냈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학자금에 대비해 자녀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관리하다 관리가 불편해 2002년 본인의 계좌로 돌린 것"이라고 "자녀 명의로 잠시 예금했다가 다시 되돌린 것이어서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6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청문회장이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상의 문제로 정황이 선포돼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DJ, 퇴임후 첫 부산 방문 15일 부산대 특강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부산대와 10·16(부마항쟁) 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공동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 부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6일 "김 전 대통령이 14일 KTX편으로 부산에 내려가 휴식을 취한 뒤 이튿날 오전 부산대 10.16기념관에서 '21세기와 민족의 미래'라는 주제로 남북관계와 통일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부산방문에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총장, 안주삼 전 경호실장 등이 수행한다.

김 전 대통령이 퇴임후 부산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내달 중순에는 전남대를 방문해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를 방문해 영남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남북의 화해,협력과 민족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06 Photonics Festival

2006 光산업의날

1부 행사 光산업거점 배움대학

도시 | 2006.9.15(토) 19:00~21:00

장소 | 2006광주 Photonics Festival

주최 | 광주시, 광주시민회, 광주시민대학

주관 | 광주시민대학

2부 행사 光산업특별한인간

도시 | 2006.9.15(토) 20:00~21:00

장소 | 2006광주 Photonics Festival

주최 | 광주시, 광주시민회, 광주시민대학

주관 | 광주시민대학